

美 쇠고기 국정조사 파행

與野 증인채택 이견...1차 청문회 무산

한나라 'PD수첩' vs 민주 '최시중' 증인 출석 격돌 기관보고도 무산... '진상규명' 일정 차질 불가피할 듯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의 증인 및 참고인 선정 범위를 두고 여야가 협상을 벌였으나, 또다시 결렬돼 1차 청문회가 무산되는 등 파행으로 치닫하고 있다.

쇠고기 국정조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양당 간사협의에서 한나라당은 MBC PD수첩 관계

자의 참고인 채택을 집요하게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특위 전체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28일은 내달 4일 1차 청문회 개최를 위해 증인·참고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는 마지막 날로, 이날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1차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게

양당 간사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내달 7일로 예정된 2차 청문회만이라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증인·참고인 협상을 계속하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7일로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 청문회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 특위는 오는 30~31일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으나 한나라당은 기

관보고가 청문회 준비성격이 강한 만큼 청문회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 국정조사 일정 자체가 파행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따라 쇠고기 국정조사가 협상의 진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폭로와 고발, 비방만 거듭하다가 흐지부지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사철 한나라당 쇠고기 특위 간사는 "현 정부의 협상 타결안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수립돼서 이 정부에 인계된 것이 밝혀지는 등 수세에 몰리자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해봤자 이득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민주당이 조속히 PD수첩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채택에 동의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이 상태대로라면 예정대로 4일 청문회를 열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언제 양당 간사 협의가 열릴지, 전체회의가 열릴지 예정된

바 없다"고 말해 청문회 개최가 무산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동철 간사는 "한나라당이 PD수첩 관계자를 부르는 것은 전체 언론의 문제로서 여야 간 따로 합의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민주당이 최시중 위원장을 주장해 간사 협의가 결렬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진상규명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이 청문회에서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문제점을 집중 추궁한다는 전략인 반면, 민주당은 최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임에 착안해 한나라당이 수용하기 힘든 최 위원장의 증인 채택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MB에 부시와 쇠고기 논의 말라 조언”

盧 전대통령 '설거지론' 정면 반박

노무현 전 대통령은 27일 당선인 신분의 이명박 대통령을 지난 2월18일 만난 자리에서 “취임 후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쇠고기 문제를 의제로 올려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충북 충주에서 민주당 변재일 김종충 이광재 최철국 의원 등을 만나 오찬을 하면서 이러한 이 대통령과의 회동 내용을 공개했다고 변 의원이 28일 전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미국의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한 요구가 과도해 참여정부는 미국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미국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쇠고기 문제를 분명히 제기할 것”이라고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쇠고기 협상시 미국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면 국내 여론 약화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최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임에 착안해 한나라당이 수용하기 힘든 최 위원장의 증인 채택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기 및 미 의회의 비준 여부와 연계해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FTA 및 미국산 쇠고기 문제 대책회의에서 “30개월 미만으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은 합의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이 이어 “입상규 농림부 장관 재직시 정부는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를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30개월 미만의 빠있는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른바 '설거지론' 논란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지난해 3월29일 노 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과 통화 내용 공개 ▲지난해 12월24일 한미 FTA-쇠고기 문제 청와대 대책회의 내용 공개 ▲지난 2월18일 노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과의 대화록 공개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우남, 강기정(오른쪽)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에 대한 진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美 쇠고기 사료조치 완화 알고도 은폐”

민주당 강기정 의원 등 “영문 오역 주장은 거짓” 외교부, 쇠고기 문서 ‘비밀 등급’ 유지 요구 논란도

정부가 미국이 4월 관보에 게재한 사료조치가 이전보다 완화됐음을 알고도 은폐를 시도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 관련 문건을 2009년말까지 비밀등급을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강기정·김우남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25일자 미 관보게재 내용이 입법 예고안(2005년 10월)보다 완화된 것이었으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5월2일 기자회견시 ‘사료로 인한 광우병 추가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오지의 허위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요 언론이 5월10일 미국의 새로운 사료조치가 입법예고안보다 후퇴했다고 보도하자 농식품부는 다음날 “영문 해석상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단순 실수로 거짓 해명했다고 두 의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두 의원은 “이러한 농식품부의 주장과 달리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 7개 기관

및 부서가 새로운 사료조치가 완화된 사실을 4월23~25일 주미대사관으로부터 한글문서로 보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이 제시한 4월23일자 주미대사관 보고는 “공표될 사료조치 강화규정은 업계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농장에서 매몰되거나 랜더링되는 가족의 경우 뇌와 척수 제거가 제외되고, 우지 등에서도 당초 안이 다소 변경됐다고 함”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의원은 “정부는 5월11일 미 관보게재에서 사료조치가 완화된 사실을 인정할 이후 지금까지 실무자의 영문 해석상의 단순 오역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주미대사관이 4월 23~25일까지 보낸 세 차례의 공문은 모두 한글문서였으며 이처럼 사료조치 내용이 완화됐음을 명백히 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처럼 청와대와 외교부, 농식품부 등 정부기관이 총동원돼 2단계에 걸쳐 은폐·조작을 한 만큼 이번 쇠고기 국정조사는 ‘영문 오역사

건’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우남 의원은 외교부가 지난해 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된 비밀문서 일체를 2009년 12월31일까지 ‘비밀’로 재분류했으며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시작되자 이들 문서를 수신·보관하는 농림수산식품부에도 공문을 보내 비밀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해 12월말 통상교섭본부 북미통상과가 작성한 쇠고기관련 비밀문서를 재검토, 2009년 12월 31일까지 비밀등급을 유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매년 12월에 비밀문서의 공개 시한을 재분류하는 데 이것도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2009년 말로 된 것이며 다른 배경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진상을 캐기 위한 국정조사가 결국 협상내용을 담은 문서를 토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 진상조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정부가 과도하게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민노당 사무총장 오병윤씨



민노당당은 28일 오병윤 최고위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오 사무총장은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민노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 17일 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3위로 당선됐다. 민노당은 또 매일노동뉴스 발원인 역할을 맡은 박승훈 최고위원을 대변인에 기용했다. /김주정기자 jnews@

여성위원장 박금자 청년위원장 송경중 대변인 이정남

민주당 광주시당 인사

민주당 광주시당은 28일 여성위원장에 박금자 전 광주시의원, 청년위원장에 송경중 광산구의원을 임명하는 등 직능별 위원장과 실·국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명단 20면)

시당은 이날 인사에서 노인위원장에 박종택 제17대 대선 광주시선대위 어르신 위원장, 장애인위원장에 정병

문 광주시 장애인총연합회회장, 직능위원장에 김태환 전 북구의회 의원, 교수연수위원장에 신영용 한국부평성기주 광주전남본부 사무총장, 법률지원단장에 이상갑 변호사를 각각 기용했다. 대변인은 이정남 광주시의원에게 맡겼다. 한편, 시당 사무처장은 29일까지 공모를 한 뒤 중앙당이 임명한다. /김주정기자 jnews@

